

존재론적 안보와 평화불안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허지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존재론적 안보와 평화불안 개념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우파 내러티브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고질분쟁으로서의 한반도 분단은 제도적 합의만으로는 평화 전환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회적 차원의 적대적 정체성 해체와 내러티브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분쟁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평화정책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강화하며, 이는 존재론적 안보 욕구와 긴밀히 연관된다. 본 연구는 청년 우파 활동가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안보화(securitization)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명확한 ‘적’으로 규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기인한 불안을 공포로 치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평화 정책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저항하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분석 결과, 평화구축은 단순한 군사적·정치적 합의를 넘어, 평화불안을 완화하고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통합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담론이 직면한 한계를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평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저항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존재론적 안보, 평화불안, 안보화, 우파 내러티브, 한반도 평화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입니다.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한반도에서는 통일, 안보, 평화, 인권 등의 개념이 때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이 발행한다. 남북한의 화해와 안정적인 공존의 강조는 자칫 분단을 영구화하는 주장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통일이 상대 국가의 흡수를 의미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 위협으로 이해되거나 무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보적인 관계로 이해되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는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처럼 단순하지 않다. 또한, 형식적·제도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이며 제도적인 평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여러 분쟁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듯 협정 체결만으로는 평화의 지속성이나 궁극적인 통일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한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2025년 4월까지 서울 중심가에서 ‘찬탄’과 ‘반탄’ 시위로 나뉜 서울 중심가의 모습은 사회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흔히 한국 사회 양극화를 지칭하는 ‘남남갈등’이란 용어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하며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대적인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교류와 협력을 우선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포용·교류·협력 중심의 진보와 안보·인권·통일 중심의 보수 진영의 정책과 담론이 충돌하는 현상이 계속되며 정책 일관성의 부재로 이어졌다. 대미·대중 정책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 또는 역사교과서 개정과 같은 국내 이슈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이념에 따른 갈등 양상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지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되어 대북 유화 조치는 사실상 예견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방송은 남북한 긴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1960년대부터 방송 재개와 중단의 패턴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평화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했었다. 한편, 일관되게 ‘1민족 1국가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했던 북한은 2023년 말 통일 포기 선언에 이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과 ‘통일포기론’ 등의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미래에 대해 새로운 구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탈냉전 이후 국가 간 분쟁 외에 기후변화, 전염병, 사이버테러와 같은 다양한 안보 위협이 등장하며 안보 논의는 군사 영역을 넘어 확장된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나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안보 이슈와 함께 남북 관계는 완전히 경색되어 전통·비전통 안보의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군사·국방 영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관련 정책들이 정권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성이 부재해 통일·평화·안보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인권은 보수, 평화는 진보의 의제로 분절화·이념화·정치화됐다. 한국 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분열이 더욱 심화하며 평화·통일 논의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상당한 현실이다(김범수 외 2023).

한반도에서도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이 정치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하겠지만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남북한 국민의 적대적인 정체성과 내러티브, 혐오와 적대의 집단 정동 해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내부 대립의 완화와 사회적 통합은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본 글은 다인종·다민족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남남갈등을 넘어서며 한반도에서 남북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의 집단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평화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성주의 관점의 안보,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평화불안(peace anxiety)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평화 정책에 저항하는 보수 진영의 담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이 정치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하겠지만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남북한 국민의 적대적인 정체성과 내러티브, 혐오와 적대의 집단 정동 해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내부 대립의 완화와

사회적 통합은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본 글은 다인종·다민족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남남갈등을 넘어서며 한반도에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의 집단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평화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성주의 관점의 안보,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평화불안(peace anxiety)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청년대학생 보수주의 단체, 트루스포럼의 활동과 내러티브를 통해 평화 정책에 저항하는 보수 진영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이론적 논의

1. 구성주의 관점의 안보

1) 포괄적 안보

탈냉전 이후 군사전략 중심의 안보 개념에서 탈피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논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부잔(Barry Buzan)을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¹⁾는 안보의 구성성을 강조하며 비군사영역으로 안보 개념이 확장되는데 공헌한다. 포괄적 안보의 주요 특징으로 안보대상(referent objects)의 다양화와 안보 영역의 확장을 들 수 있다(Buzan 1991a). 국가만이 안보의 유일한 대상이었던 전통 안보와는 달리 국가 외에 다양한 하부 집단, 초국가적 기구, 심지어 개인도 안보대상으로 논의된다. 주목할 점은 포괄적 안보에서 국가는 여전히 안보의 주요 공급자이지만, 경우에 따라 국가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국가가 안보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험을 근거로 안보 개념을 발전시킨 코펜하겐 학파는 또한 안보를 지역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즉, 포괄적 안보는 국가가 자리한 특정 ‘지역’ 차원의 안보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룬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 간에

1) ‘코펜하겐 학파’는 1985년에 설립된 코펜하겐 평화연구소(Copenhagen Peace Research Institute: COPRI)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개념을 주창한 연구자 집단을 가리키며, 2005년 코펜하겐 평화연구소는 덴마크 국제관계연구소(Da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로 합병됐다.

는 역사적 관계로 인한 친밀감이나 적대감으로 인해 안보 관계의 특수한 패턴, 이른바 ‘안보 콤플렉스(security complex)’가 형성되며 이는 국가의 안보 정책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uzan 1991b),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는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경제·군사적 이해관계로만 이해되기 어렵다. 반드시 식민 지배로 인한 한국인들의 대일본 적대적 정체성과 집단 정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개념은 국가가 여전히 중심에 있지만, 국가를 둘러싼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되면서 안보대상이 다양화됐다(Buzan 1991c).

탈냉전기 안보연구의 또 다른 큰 변화인 안보가 적용되는 영역의 확장은 대외적인 위기 요인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코로나 위기를 통과하며 주목받은 ‘보건 안보’가 대표적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포괄적 안보는 군사 영역과 정치·경제·사회·환경의 비군사 영역으로 안보를 구분한다. 이러한 안보 영역의 확장은 평화연구에서도 목격된다.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제거된 상태의 ‘적극적 평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 안보는 여전히 안보의 주요 행위자를 국가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화연구와 다르다(Buzan 1991b).

2) 안보화

국가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초기 코펜하겐 학파는 여전히 현실주의 틀 안에 있었다. 하지만 점차 안보의 구성성(constructivity) 즉, 다양한 정치적·비정치적 이슈가 안보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담론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구성주의에 가까워졌다.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안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미 국가에 ‘부여된(given)’ 상태로 안보 구성 요소 간의 이해나 관계, 규범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안보의 영역이나 구성요소들이 처음부터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화행(speech-act)’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constructed)’ 것으로 인식한다. 즉,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특정 이슈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동적인 과정 자체가 안보의 ‘화행적 행

위'이자 '안보'이다. 언어의 화행적 행위는 대상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언어의 서술적 차원을 넘어 발화를 통해 특정 행위가 실행되는 수행문(performatives)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구성주의 안보 연구자들은 안보와 관련 없는 특정 사회적 이슈들이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구성되는 담론 과정에 주목하며(Buzan 1997, 14), 사회정치적 담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즉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안보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안보화(securitization)'는 이렇게 동적이며 가변적인 화행을 통해 안보 개념이 구성되는 담론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이다(Waever 1995). 위협이나 위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행위자들의 인식과 상호 관계,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안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의 '수사적(rhetorical)' 구조이다(Balzacq 1995). 수사적 과정을 통해 특정 이슈가 안보적인 문제로 수용되면 안보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난민 위기이다. 난민이 처음부터 수용국 안보에 객관적인 위협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다. 난민 대량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면서 집단 불안과 적대 감정이 강화되면서 난민은 수용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안보화됐다. 안보화 이론은 유럽에서 난민 이슈가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안보 의제로 설정되기까지 사회·정치적 담론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2. 안보와 평화구축

1) 존재론적 안보와 안보화

한반도의 맥락에서 평화와 안보 정책은 때로 경쟁하고 충돌한다. 군사나 국방 영역에서 논의되는 물리적 안보와는 구별되는 '존재론적 안보' 개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복합한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존재론적 안보는 "모든 개인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한다(Giddens 1991, 185)"는 주장을 근거로 발전한 개념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유지될 때 '전기적 연속성(biographical continuity)'을 확보하게 된다. 전기적 연속성의 유지 즉, 자기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존재론적 안보의 핵심이다.

국제정치에서 존재론적 안보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실존적 안보를 의

미한다. 구성주의에서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공유된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던 국가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인식이다. 주요 국가를 보는 관점, 예를 들어 동맹이나 적국과 같은 중요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국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행동과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Mitzen 2006a). 한국에게는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주요 국가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요 타자의 정체성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일상화하고(Mitzen 2006a) 정체성에 부합하는 외교적 선택을 통해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Steele 2005). 존재론적 안보 개념은 때론 물리적인 안보의 관점과 배치되는 평화구축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평화구축을 위해 물리적·경제적 위협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대적 상대와 협력을 선택하거나(Mitzen 2006a; 2006b),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인도주의 개입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존재론적 안보 욕구가 있다(Steele 2005).

반면에 고질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에게는 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분쟁 중에 굳어진 ‘피해자’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상대국에 대한 악한 ‘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 존재론적 안보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anxiety)과 공포(fear)의 차이를 강조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든스는 안보 정책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불안’의 역할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Rumelili 2015; Kinnavall & Mitzen 2020). 공포는 실체가 명확한 적대적 존재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다. 반면 불안은 실체가 명확한 적대적 상대가 부재한 경우 또는 미래에 대한 불가지성(unknowability)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형성되는 감정을 뜻한다(Rumelili 2020, 263). 분쟁 과정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경우 실체가 명확한 ‘악한’ 적으로서 상대에 대한 공포가 유지되거나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한’ 피해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단합은 강화된다. 다시 말해 적대적 타자의 악한 실체가 명확히 규정되고 적대와 혐오가 강화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대의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한 불안은 제거된다. 다시 말해 알 수 없는 미래와 정체가 불확실한 상대에 대한 불안이 적을 향한 익숙한 공포로 치환될 때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장기 분쟁의 종식은 궁극적으로 적이었던 상대를 공존과 평화를 위한 적법한 상대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평화프로세스로 인해 익숙한 분쟁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기에 미래의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이러한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평화불안(peace anxiety)의 감정은 분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평화 정책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Rumelili 2015).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적 경로는 상호 적대라는 익숙한 경로에서 탈피해 협력과 공존, 화해와 같은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한 피해자로서의 정체성과 악한 적으로서 분쟁 상대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안보 추구 욕구는 평화프로세스에 저항하게 만드는 사회심리적 기제이다(Rumelili 2020, 267). 이런 관점에서 익숙한 분쟁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평화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내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분쟁에 익숙한 국민은 평화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미래와 불안의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적대적 대치와 적에 대한 공포를 지속시키는 ‘현상 유지’의 선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보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Waever 1995, 46-86; Buzan, Waever & Wilde 1998). 적대적 상대의 행위가 우리 집단의 존립에 위급한 위기로 인식되도록 정치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상대의 특정 행위가 안보화된다. 이렇게 위급한 공포와 위기감이 사회에 주입되면 예외적인 비상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수용된다. 또한, 분쟁 상대는 명확한 공포의 대상이자 적으로서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적과 연관된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 프로세스가 진행된다(Marlow 2002; Kinnvall 2004). 적과 나를 구분하는 흑백논리에 기반한 이분법적 내러티브도 더욱 확고해진다(Rumelili 2004; Rumelili 2007). 9·11테러 이후 이슬람이 미국의 존립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급박한 안보 위협으로 안보화되면서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비상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안보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격과 테러 가담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에서 테러국으로 지명된 국가와 연관된 무슬림 시민들에게 상당한 사생활 침해를 가하거나 테러 용의자의 비합법적 구금 등이 정당한 안보 조치로 수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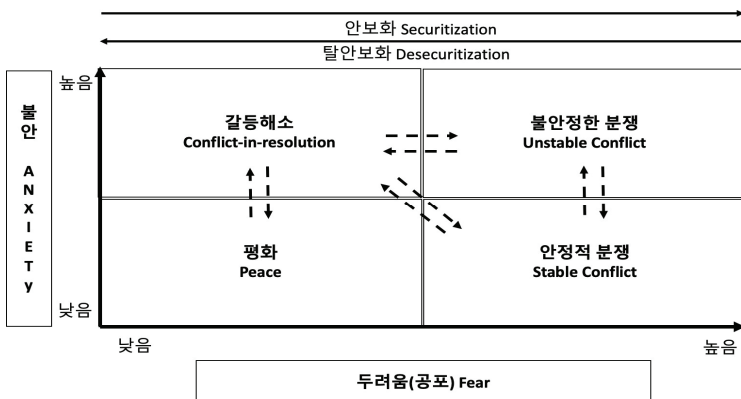
이처럼 안보화는 평화불안을 통제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포로 치환하기에 존재론적 안보 확보에 유용한 방식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전환을 방해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특히 장기 분쟁과 안보 딜레마에 익숙해진 국가는 ‘악한 타자’와 ‘선한 자아’를 뚜렷이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존이라는 합목적성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확립한다(Rumelili 2015, 13).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확립된 적에 대한 정체성과 적대와 혐오의 감정과 그를 토대로 형성된 일련의 의미체계와 도덕적 기준의 재설정을 요구한다. 이는 악한 적으로서 상대 정체성을 약화하고 선과 악에 대한 기존의 도덕적 기준을 흐리고 모호함을 낳으며 분쟁을 겪으며 고착된 적대적 정체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일상의 관습을 방해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존재론적 불안을 생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평화불안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공존이나 화해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 정책에 저항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Mitzen 2006a, 343).

2) 존재론적 안보와 평화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의 정도는 크게 변화된다. Rumelili(2015)는 <그림 1>과 같이 분쟁에서 평화로의 과정을 ‘안정적 분쟁’ - ‘불안정한 분쟁’ - ‘분쟁 해소’ - ‘평화’의 4단계로 나누고 공포와 불안의 변화를 도식화했다.

〈그림 1〉 분쟁 해소와 존재론적 안보의 4단계(Rumelili 2015, 21)



안정적 분쟁(stable conflict)은 분쟁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실체가 명확한 적에 대한 공포는 높은 상태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의 수준은 낮게 유지된다. 분쟁으로 적에 대한 적대와 혐오가 강화되고 개인적·사회적 차원 공포감은 높아지더라도 이미 상당히 축적된 분쟁 경험은 상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형성하게 되어 예측 불가능에 따른 불안은 오히려 감소한다. 안정적 분쟁 상태에서 강화되는 공포는 안보화의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장기적인 분쟁에서는 상대를 도덕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악마화’와 상대의 특정 행위가 우리 집단의 생존에 대한 응급한 위기라는 의식을 고취해 계엄과 같은 응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안보화가 쉽게 수용된다. 안보화는 우리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적 의미 체계 발전에 활용되기도 한다(Rumelili 2015). 평화불안과 안보화로 적대적인 이분법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후 계속된 고질적인 남북한 대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한국의 주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산주의는 악한 이데올로기라는 의미 체계를 적극 수용하고 신념화한 개인들은 북한을 적이 아닌 평화적 공존 또는 통일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적법한 정치적 상대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저항하는 심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한편, 불안정한 분쟁(unstable conflict) 상태는 정치적 상황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분쟁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높지만, 변화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도 증가한다. 분쟁 해소(conflict-in-resolution) 단계에서는 적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변화한다. 적에 대해 느끼는 적대와 공포는 낮아지지만, 관계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불안은 증가한다. 분쟁 해소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궁극적으로 적으로서의 정체성은 해제되고 공존의 관계가 형성된다. 평화로운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에 적합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평화 단계에서는 적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장기적으로 낮은 상태로 관리된다.

이처럼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과정에서 불안의 일시적인 강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강한 불안을 낮은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 분쟁에서는 상대

집단을 향한 적대와 혐오가 사회에 집단 정동으로 이미 굳어진 장기 분쟁에서는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분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평화를 위해 적대적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을 강화하고 기존의 이분법적 정체성과 적에 대한 적대감 재활성화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을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포와 불안의 역학을 고려한다면, 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과정은 분쟁의 기억으로 인한 적대와 혐오를 완화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적에 대한 공포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는 평화 단계로 진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구축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과 공포가 모두 낮은 상태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대적 상대가 우리 집단의 생존을 위협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또는 그런 의도를 포기했다는 점을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상대에 대한 비적대적 정체성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의미와 신념 체계, 그리고 도덕적 기준이 모두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분쟁국 간의 정치적 관계와 체제 변화가 필요하지만, 분쟁으로 인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집단 정동의 변화를 포함해 사회 차원의 전환도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고 외교적 관행이 해체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적대적 정체성과 관습을 유지하려는 존재론적 안보 욕구는 분쟁 해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분쟁 해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적대적 정체성에 반하는 정보가 장기적으로 계속해 유입돼 인지적 충격이 반복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Hopf 2010). 반복된 인지적 충격을 통해 기존 관행이나 사고방식 대한 반성적 성찰로 이어지게 되면 불안의 감정이 평화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안은 기존 정체성에 반하는 정보를 긍정적인 인지적 충격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어 주는 감정적 분수령이 된다(Rumelili 2015, 21). 분쟁 해소를 위한 일련의 정치적 변화에서 기존 존재론적 안보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론적 안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불안은 생산적으로 기능하지만, 평화 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심리에서 오히려 적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고 적대와 혐오의 정동을 재생산

해 분쟁을 강화하는 반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크다. 결과적으로 분쟁 해소 과정에 동반되는 평화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분쟁 해소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Ⅲ.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분쟁의 경로와 관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불안정을 통과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관리해야 하기에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다.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적대적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오히려 적에 대한 적대와 이분법적 신념을 강화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평화프로세스에는 구성원들이 경험할 평화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는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된 고질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실체가 명확한 ‘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신념을 확고하게 정립한 국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특히 내러티브가 강한 보수 성향 국민에게는 여전히 안보에 큰 위협인 북한을 협력과 공존을 위한 적법한 상대로 인식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평화 정책에 저항하는 심리가 강화된다. 적대적 상대인 북한을 공존과 화해의 파트너로 정체성을 전환하는 시도가 한반도의 미래와 한국의 존립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조치로 이해되기에 평화불안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처럼 해결이 까다로운 장기·고질분쟁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분쟁 종식만큼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적으로서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화해하는 여정이며, 이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Bar-Tal 2013). 적이었던 상대와 다시 이웃해 살아가거나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불안한 심리와 감정이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적으로서의 정체성이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한반도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려면 정치 영역에서 분쟁 종식이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를 넘어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평화프로세스를 이끄

는 정치적 리더들에게 존재론적 안보 욕구가 강한 구성원들이 마주하는 평화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Rumelili 2015). 지금까지 주로 진보 정부에 의해 진행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는 이런 노력이 부재했다. 평화프로세스에 저항하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으로 인한 주장들이 무지한 것으로 취급되며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평화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심화했다. 결과적으로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가 분열하고 소통이 부재해 이해의 폭이 좁아졌다. 평화가 아무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규범일지라도 추구 방식이 소통과 설득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평화는 하나의 협정 체결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분쟁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불안정한 프로세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에서 소통과 협력은 필수지만, 안보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적과의 교류나 화해는 불안의 감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남북한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공존과 나아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대의 이미지를 재형성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적으로서의 정체성에 함께 따라오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반한 확고한 신념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기존 관념에 반하는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더라도 정체성과 이미지의 변화가 쉽지 않다. 분쟁 상대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는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론적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데, 이 인식의 틀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나 경험이 유입되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분쟁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기존 신념이나 정체성에 반하는 정보를 수용하고 새로운 신념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전환점이 필요하며 불안이라는 강한 감정이 오히려 감정적 분수령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Bleiker & Hutchison 2008, 385-403).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분쟁 해소란 분쟁국들이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신념 체계를 재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정체성과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평화적 관행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프로세스를 통해 평화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해소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은 없다. 평화는 사회마다 다른 존재론적 안보의 틀과 문화 역사적 맥락, 개인·사회·국가적 차원의 합의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는 본질적으로 지역적(local)이며 해당 사회에 축적된 일상적인 관행의 결과물이다(Richmond 2005).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평화구축의 특성과 남북한의 경색된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절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사회적 분열과 평화에 저항하는 우파 청년들의 내러티브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평화에의 함의를 모색한다.

1. 남남갈등과 평화불안

남남갈등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초기에는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주요 타자인 북한과 미국 정책을 둘러싼 정책 갈등 중심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적’ 논란이다.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된 후 삭제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2001~2003년까지 국방백서 발간 자체가 중단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2004)’,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됐다. 보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북한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2008)’으로 표기했으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은 우리의 적(2020)’이라고 적 표현이 재등장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된 2018년, 2020년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하며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출간된 2022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재등장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적 표현과 관련된 질문이 어김없이 등장했다(권혁철 2025). 이는 북한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물론 주요 상대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외교 관계에 관해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확연한 의식 차이와 갈등이 목격돼 남남갈등의 기저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둘러싸고 합의 되지 못한 관점이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Heo 2020).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갈등이 단지 정치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23년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Psick Univ)’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하수영 2023).

대북·대미 정책 논란으로 시작된 남남갈등은 국가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역사 인식 논란으로 확산한다. 교과서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 전쟁’은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생 역사교과서 개정과 관련해 최근까지 발생했다(이유진 2023). 이념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남남갈등은 현재진행형이며, 특히 건국 역사 해석은 역사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이다.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같은 용어 정립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해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국을 기념할 것인지, 반대로 통일의 실패로 한반도에 들어선 두 개의 분단 정부 중 하나로서 인식할 것인가, 곧 대한민국의 정당성 문제이다. 건국절 제정 논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정체성 갈등은 분쟁이 평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질적 장기분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적대와 갈등문화, 그리고 갈등 내러티브가 해체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존 내러티브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대안적인 평화 사상과 담론이 등장하는 시기를 ‘해동기(unfreezing)’라고 한다(Bar-Tal 2019). 공적 영역에서 분쟁의 평화적 종식을 지지하는 사상과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사회에 확산한다. 해동기에 분쟁 상황에서 굳어진 적대의 집단 정동과 정체성, 갈등문화가 성공적으로 해체되고 정치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된다면 분쟁이 종식되고 사회 전반에 평화를 지지하는 평화문화의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타났듯이 분쟁의 평화적 종결을 지지하는 담론 형성과 정책 변화는 기존 적대적 정체성과 문화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이 강화되며 평화정책에 반대하고 적대성을 유지하려는 집단 심리가 작동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남남갈등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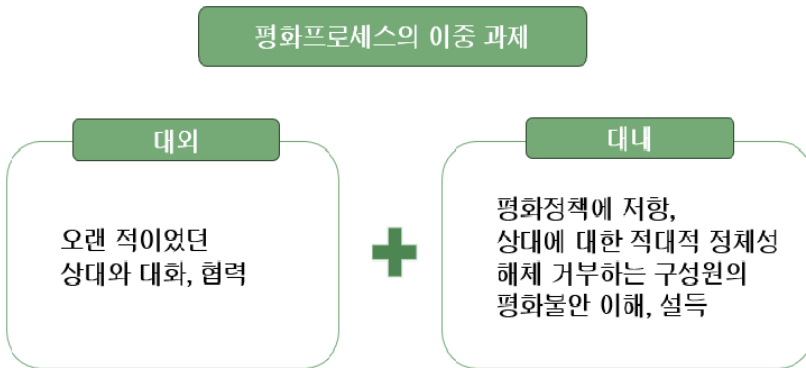
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포용과 협력으로 전환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본질적으로 북한과 분쟁의 맥락에서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가정체성과 적으로서의 북한 정체성에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즉, 정책 차원을 넘어 본질적인 국가정체성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문제다(Heo 2020). 물론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대북 적대성은 약해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황지환 2017). 또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된 일련의 과거사 청산 정책, 제주 4·3, 보도연맹,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교과서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서 역사 인식의 전환과 공식 역사 내러티브 수정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을 여전히 강력하고 존재론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보수 성향 국민이 느끼는 평화불안을 무지의 결과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는 문제가 노출된다. 평화불안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평화·통일 정책의 일관성은 없고 보수 진영은 갈수록 평화프로세스나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존재론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저항하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집단 신념과 의미, 도덕 체계의 중심축인 집단정체성은 적과 우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배타성을 기초로 형성된다. 국가의 존재론적 안보 욕구는 형성된 정체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도덕과 의미 체계를 생산하고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재현된다. 만일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조직이나 정당이 각기 경쟁하는 다른 정체성과 내러티브를 지지한다면 내러티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엘리트와 정당 간 극심한 투쟁이 발생한다. 이 내러티브 경쟁 과정에서 이미 확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존재론적 안보의 욕구가 우위를 차지하면 기존 정체성이 강화된다. 반면 기존 정체성에 배치되는 대안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체성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남갈등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격되는 극심한 정체성 경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청년우파 담론과 평화불안

평화프로세스는 적이었던 상대와 소통하며 협력을 진행해야 하기에 과정 자체가 어렵다. 동시에 오랜 적에 대한 불신과 공포로 평화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안보 문제,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미·중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상황까지 평화와는 요원한 현실이다. 또한 과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북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문제도 있다. 인권이 북한 정권의 악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도구화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축소되어 평화와 연결된 통일, 안보, 인권과 같은 주요 영역이 선순환을 통해 긍정적이며 통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그림 2〉 평화프로세스 이중 과제



* 저자작성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는 전형적인 안보화의 사례이다. 계엄 선언문은 민주당에 의한 검사와 정부 관료 탄핵안 발의, 예산 감액 시도, 부정선거 가능성 등의 이슈를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긴급한 위협으로 안보화하고 계엄은 불가피한 응급조치로 정당화한다. 계엄 지지를 선언했던

우파 청년 단체들은 정권교체와 윤 대통령 구속에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국가 존립에 대한 급박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계엄 주장을 수용하는 청년들의 내러티브를 존재론적 안보와 평화불안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우파 학생운동 그룹인 ‘트루스포럼(Truth Forum)’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정국이 한창 혼란스럽던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출하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 캠퍼스에 게시한다.

민주주의를 빙자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며 걸핏하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며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부패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 국헌문란 세력이 누구인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 종북 반국가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전쟁이 나면 김정은과 함께 남한의 반동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며 무기와 폭동을 준비한 통합진보당, 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전복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일까?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은 ‘세기와 더불어’다.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은 대표적인 주사파다. ... 그는 전향서를 쓴 것도 진심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 숲’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4.12.24. 트루스포럼)

북한과 중국에 지나치게 순응하며 간첩을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질서에 심각하고 응급한 위협으로 안보화되며, 계엄령 선포는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불가피한 응급조치로 정당화하고 있어 전형적인 안보화 논리에 동조하는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에 협력적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관점은 보수 내러티브에 일관되게 재현되는데, 실체가 명확한 ‘적’으로서 북한과 적대적인 주요 이웃으로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치와 적대에 기반해 형성된 정체성 인식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의 더불어민주당 집권으로 추진될 친북·친중 정책과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곧 평화불안이 강하게 관찰된다.

또 다른 청년 우파 단체인 ‘탄핵을반대하는청년모임(탄대청)’의 권예영 대표는 한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혁과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수호 등 탄대청이 외쳐온 가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혀(박서아 2025) 중국의 선거 개입 음모론에 대한 이들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탄대청 정우진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반대한민국 세력’과 탄대청 집회에 등장하는 ‘CCP OUT’ 구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장혜원 2025).

윤 대통령의 ‘반대한민국 세력’ 공포에 모두가 충격 받은 분위기다. ... 공산주의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근본적 자유를 침범하고 국가와 공공사회와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많은 억압을 자행할 수 있는 세계관적 특성을 보인다. 그간 반국가단체·집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세력은 결국 반공의 가치를 따르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인 사적 자치에 대한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이 세계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 중국은 우리의 경제 주권과 선거 주권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산업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해 잠식되었고, ... 중국의 기업들이 성공하려면 공산당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의 개방된 경제에 무임승차해온 셈이다. ...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에게 부여된 참정권이다. ... 이들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이미 자명한 일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과 정당 간 교류를 이어온 정당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자국의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탄대청 공동대표 정우진)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세계관 전쟁으로 규정한다. 이들에게 ‘우리’를 정의하는 기준은 민족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체제다. 국가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안보의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민족을 ‘우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겐 북한을 포함한 민족의 생존이 최선의 가치이며 반민족주의 제국주의자들이 적대세력이다. 한편,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보수 내러티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안보의 대상이기에 이를 위협하는 북한이 적대세력이다. 중국의 선거 개입 주장을 통해 공산 세력의 한국 침투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는 담론의 기저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정체성에서 적으로 간주되는 북한과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게 되면 반공주의에 기초한 보수정체성에 위기가 도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이 있다. 또한 이들의 불안을 안보화에 활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프로세스는 대외적으로 적대적 상대와 협상을 통해 분쟁 현상의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분쟁 유지로 이익을 획득하는 정치세력의 저항뿐만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들의 평화불안을 완화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이다.

IV. 결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

본 연구는 평화를 위한 화해나 협력에 저항하고 기존 적대성의 지속을 원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토대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추진된 통일·평화정책의 한계 즉,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적대적 정체성의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대한민국의 위기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을 극단주의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분쟁을 경험한 모든 민족과 국가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과 익숙한 대치와 대립의 경로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적대적 북한 정체성과 관련된 의미 체계 및 도덕 기준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불안을 감내하면서 안보딜레마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공존으로의 전개를 선택할 수 있다. 분쟁 관계 종식 과정에서 단기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평화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진영 논리와 이해를 넘어 정치적인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쟁과 분쟁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 평화구축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들과 시민사회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강화되는 일부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극단주의로 치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는 정치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분쟁 사례마다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 풀뿌리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지닌 정치지도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한때 적이었던 상대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적과의 협상을 굴복으로 인식하고 평화에 저항하는 자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은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협상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평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진 정치와 사회적 리더들의 역할에 주목한다(Rosler 2019). 적이었던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지만 우리 집단의 안보가 우선되고 있음을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설득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력도 필요하다. 이 과정은 레더라흐(Lederach, 1988)의 주장처럼 정치 적 노력으로만 충분치 않으며 지식인, 종교인, 교육자 등 각 분야의 사회 지도층과 시민사회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다.

허지영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2020)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평화분쟁 이론 및 사례, 한반도 평화구축 등을 연구하고 국제정치,
유럽정치, 분쟁과 평화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Envisioning Agonistic Inter-Korean
Relations: Lessons Learned from Germany and Ireland*, *Peace Review*, (Mar 2025),
The Iran Nuclear Deal (JCPOA) and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60(3) (May 2025)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권혁철. 2025. “20세기 유명 ‘북한 주적’ 논란, 장관 인사청문회 떠돌았다.” 『한겨레』(7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208689.html>
- 김범수 외. 2023.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통화연구원.
- 민병원. 2006.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세계정치』 제5권 13호, 18-19.
- 박서아. 2025. ““우파 대통령 당선 위해 힘 모을것” ... 탄반 청년들, 대선 정국 속 재정비.” 『뉴데일리』 (4월 8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8/2025040800402.html>
- 이유진. 2023. ““교육과정 누락 논란’ 5·18,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엔 포함.” 『한겨레』(1월 27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77254.html>
- 장혜원. 2025. “[인터뷰] 탄대청 정우진”청년이 윤 탄핵 저지, 자유·민주 수호.” 『스카이데일리』(1월15일)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0160
- 하수영. 2023. ““북한이 주적, 왜 이말을 못해” 구독자 264만 ‘피식대학’ 씨끌.” 『중앙일보』(12월 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442#home>
- 황지환. 2017.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31.
- Balzacq, Thierry. 2005. “The Three Faces of Securitization: Political Agency, Audience and Contex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2): 174=176.
- Bar-Tal, Daniel. 2013. *Intractable conflicts: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and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al, Daniel. 2019. “Transforming Conflicts: Barriers and Overcoming them.” Elman, Catherine Gerard, Galia Golan and Louis Kreisberg. eds. *Overcoming Intractable Conflicts: New Approaches to Constructive Transformations*. Londo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 Buzan, Barry. 1991a.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3): 434-438.
- Buzan, Barry. 199b.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Buzan, Barry. 1991c.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11.
- Buzan, Barry, Ole Waever, and Jap 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CO: Lynne Rienner.
- Bleiker, Roland and Emma Hutchison. 2008. "Emotional Reconciliation. Reconstituting Identity and Community after Trauma."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3): 385-403.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New York: Polity Press.
- Heo, Ji Young. 2020. "Contentious Narratives on National Identity of South Korea: How to Understand the Self and the Significant Other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h.D. Diss., Freie Universitat Berlin.
- Hopf, Ted. 2010. "The Logic of Habi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4): 539-561.
- Kinnvall, Catarina. 2004. "Globalization and Religious Natonalism: Self, Identity, and the Search for Ontological Security." *Political Psychology* 25(5): 747-767.
- Kinnavall, Catarina and Jennifer Mitzen. 2020. "Anxiety, Fear, and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Thinking with and beyond Giddens." *International Theory* 12: 240-256.
- Marlow, Jim. 2002. "Governmentality, Ontological Security, and Ideational Stability: Preliminary Observations on the Manner, Ritual and Logic of a Particular Art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7(2): 241-259.
- Mitzen, Jennifer. 2006.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2), 341- 370.
- Lederach, John Paul. 1998.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Rosler, Nimrod. 2019. “The Creation of Space for Conflict Change: Context, Society, and Leadership in Northern Ireland during the 1990s.” Elman, Catherine Gerard, Galia Golan and Louis Kreisberg. eds. *Overcoming Intractable Conflicts: New Approaches to Constructive Transformations*. Londo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 Rumelili, Bahar. 2004. “Constructing Identity and Relating to Difference: Understanding the EU's Mode of Differenti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0(1): 27-47.
- Rumelili, Bahar. 2007. *Constructing Regional Community and Order in Europe and Southeast Asia*. Basingstoke: Palgrave.
- Rumelili, Bahar. ed. 2015. *Conflict Resolution and Ontological Security: Peace Anxieties*. Oxon & New York: Routledge.
- Rumelili, Bahar. 2020. “Integrating anxiety in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obbes, existentialism, and ontological security.” *International Theory* 12: 257-272.
- Steele, Brent J. 2005. “Ontological Security and the Power of Self-Identity: British Neutrality and the American Civil W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1: 519-540.
- Waeber, Ole. 1995. “Securitisation and Desecuritisation.” in Lipschutz. R.D. ed.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bstract

Right-wing Narratives of the ROK and Korean Peacebui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Ontological Security and Peace Anxieties

Ji Young Heo *

This study examines how right-wing narratives in South Korea shap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lenses of ontological security and peace anxiety. Because the Korean division is a protracted conflict, institutional agreements alone cannot achieve lasting peace; transforming antagonistic identities and societal narratives is also essential. During transitions from conflict to peace, uncertainty heightens psychological resistance to peace initiatives, reflecting a desire for ontological security. Through an analysis of discourses among young conservative activists, the study shows how securitization constructs North Korea and China as explicit “enemies,” converting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nto fear. These narratives provide a social foundation for strong opposition to peace policies by depicting them as existential threats.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eacebuilding requires not only military and political agreements but also leadership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ies that address peace anxiety and manage internal tensions. By reframing limitations of South Korea's peace discourse through ontological security,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psychosocial approaches to mitigate persistent resistance in implementing peace policies.

Key Words: ontological security, peace anxiety, securitization, right-wing narratives, Korean Peacebuilding

논문투고일: 2025. 09. 26.

논문심사일: 2025. 11. 10.

게재확정일: 2025. 11. 19.

* Research Professor,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